



민주주의 '불복'  
유신 되살리기  
유리지갑 털기

촛불과

노동자 요구 · 투쟁

결합으로 맞서자

박근혜 정부는 '7개월 동안 준비했다'던 세제개편안을 4일 만에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물러섰다. 유리지갑 터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급속히 커지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특히 8월 10일에 전국적으로 10만 명까지 모인 촛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까 봐 우려했을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정원 게이트의 책임을 회피하며 촛불을 무시해 왔다.

심지어 원조 공안검사도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부정선거와 정치공작에 도가 튼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며 민주주의 '불복'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6월 말에 5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은 한 달 반만에 1백 배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불길처럼 번지는 풀뿌리 시국선언에는 공무원노조와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동참했고, 청소년과 대학생, 교수 들의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촛불의 기세가 커지면서 'NLL 물타기'도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사초 증발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호응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저들의 시도는 여전하다.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끌려 나온 김용판과 원세훈도 기만적 태도로 일관했다.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로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를 파묻고 1퍼센트가 판치는 불의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울 것이다.

#### 화들짝

지금 정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은 단지 촛불을 든 수만 명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48퍼센트 뿐 아니라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의구심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를 수습할 카드가 별로 없다. 박근혜 정권이 한 발도 물러서기 힘든 이유는 국정원 게이트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

'1퍼센트'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톱톱 뭉쳐서 불법과 부정까지 불사하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발 물러서면 자신들이 펼치려는 반동적 정책들도 그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더구나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위기가 박근혜 정권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하며 재벌 퍼주기에 나서도록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박근혜는 공작정치와 공안 탄압에 능숙한 김기춘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돌파하려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대선에 불복한다

는 거냐' 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은 믿기 힘들다. 2008년 촛불 때도, 한미FTA 투쟁 때도 민주당은 제일 먼저 거리를 떠나며 우리의 뒤통수를 친 바 있다. 8월 10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은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다가 일부 사람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한테서 독립적인 관점으로 아래로부터 투쟁과 '거리의 정치'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거리의 운동을 국정조사를 위한 압력병기용으로 한정하거나 통제해 박근혜가 시간을 끌며 빠져나갈 틈을 쥐서는 안 된다.

조금이나마 진실이 밝혀지게 만든 힘도, 톱톱 뭉쳤던 박근혜·이명박·전두환 간에 틈이 벌어지게 만든 힘도 거리에서 나왔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반동적 정책에 대한 분노를 거리로 끌어내자.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거리의 촛불과 결합시키자.

# 쟁점을 확대하고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 등 경제 위기 고  
통전가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민  
주화'는 내팽개쳐졌고, 복지 확대 공약은  
줄줄이 '먹튀'해 버리고 있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를 사실상 도  
와쳤고,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  
며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부동산 투기꾼만을 위한 정책 속에 전월  
세 대란이 계속되고 있고, 공공요금 줄줄  
이 인상도 예고되면서 더운 날씨에 스트  
레스를 더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민주주의 유린 범죄  
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 위기 고통전가애  
도 맞아야 한다. 투쟁의 쟁점과 요구를 확  
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철도  
노조, 쌍용차 해고자들, 공무원노조의 투  
쟁 발언은 촛불집회에서 커다란 호응과  
지지를 받아 왔다.

따라서 지금 민영화 반대, 부자 증세 등



으로 쟁점 확대는 촛불과 조직 노동자 투  
쟁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쟁점 확대하면 조점이 흐려지고 시위 규  
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지금 입단협  
시기를 맞아 노동자 투쟁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 하고 한 바  
있다. 조직 노동자 운동은 탄압의 표적일  
뿐 아니라 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것  
이다.

거리의 촛불과 조직된 노동자들의 요  
구·투쟁을 결합시켜서 박근혜를 더욱 압  
박해야 한다.

# 시국회의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금 촛불은 의미있는 성장을 하고 있  
지만, 2008년 촛불과 비교하면 아직 못미  
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주요 시  
민사회단체들이 결집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  
의 구실이 중요할 것이다.

촛불의 성장에 기여해 온 시국회의는  
촛불의 유지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인 구  
심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시국회의  
는 쟁점 확대를 통해 박근혜에 맞선 다양  
한 불만이 거리로 나오도록 조직해야 한  
다.

이미 광장의 촛불 속에서 수많은 노  
조·단체들이 와서 서명을 받는 등 자신  
들의 요구를 알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게도 시국회의의 주요 단체  
들은 쟁점 확대를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 보조물

이것은 아래로부터 운동 강화를 중심으  
로 보지 않기 때문인 듯 하다. 참여연대 등  
일부 NGO 단체 지도자들은 '촛불은 국정  
조사를 위한 압력용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국정조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촛불을 국정조사의 보조물로  
만 자리매김하니 현실에서는 민주당 뒤편  
무니만 쫓게 된다. 실제 시국회의는 민주  
당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요구와 주장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8월 10일 집회에서는 사회자가 시국회  
의의 공식 팻말만 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  
조했다.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담은 팻말을 만들어 온 노동자·단체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심지어 시국회의의 내에서, 민주당 전병  
현 발언 때 아유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  
다"는 의견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참가  
자들의 자발성과 활력을 고무하는 데 전  
혀 도움이 안 된다.

더구나 이런 태도는 민주당이 뒤통수를  
칠 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시국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민중  
운동 단체 지도자들이 이런 방향을 추수  
하는 것도 아쉽다.

구체적 상황에서 어느 방향을 택하느냐  
에 따라서 운동의 발전과 정체가 갈릴 수  
있는데 말이다. 민주노총 등이 더 적극 조  
합원들을 동참시키면서 이 운동의 주도적  
구실을 하려고 할 필요도 있다.

급진좌파 단체들이 시국회의에 참가해  
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운동의 성장에 기  
여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  
까운 일이다.

국정조사가 끝나고 민주당이 국회로 돌  
아가더라도 집회, 행진, 파업 등 대중운동  
건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도전하려는  
노력은 지속·강화되어야 한다.

#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박근혜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경  
제부총리 현오석은 13일 '증세 기준을 연  
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  
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자 유리지갑에서 돈을 훔쳐 가려다  
가 들키니까, 쥐었던 돈의 일부만 도로 집  
어넣은 셈이다.

반면, 재벌과 1퍼센트 부자들의 강철 금  
고는 여전히 건드리지 않고 있다.

결국 '증세 없이 복지 늘린다'는 박근  
혜의 허풍은 '노동자 증세로 부자 감세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언론이나 진보진영의 일부가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본적 방향은  
옳다'거나, '세금폭탄 운운하며 조세 저  
항을 부추기지 말자'고 하는 것은 잘못이  
다.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조세 불평등 속  
에서 노동자들의 '조세 저항'은 완전히 정당  
하다.

"2000년 대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  
득은 5백33퍼센트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

은 겨우 1백51퍼센트만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가처분소득은 86퍼센트 늘었는  
데, 소득세는 1백42퍼센트로 소득에 비해  
대폭 늘었다."(선대인경제연구소)

이렇게 걷은 돈은 4대강 같은 곳에 버려

지거나 1퍼센트 특권 세력을 위해 펄펄 쓰  
여졌다. 국정원의 일베충 댓글 알바에 수  
십억 원을 썼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증세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 '재벌·부자에게 세금, 노동자·민중에게 복지'가 답이다

복지 확대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는 박근혜에 맞서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진보진영 일부의 '상대적으  
로 임금이 높은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  
서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우려스럽다.

경제 위기 속에서 주류 정당들과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  
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도 세금 더 내자'고 할  
때가 아니다. 거대한 대중투쟁으로 재  
벌·부자 증세와 노동자 복지 확대를 쟁  
취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스웨덴 등 잘 정  
비된 복지국가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소수 특권층을 압박했을 때 세워졌다.

지금은 진정한 격차인 계급간 불평등과  
소수 특권층의 탐욕에 맞서 단결할 때다.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와 '노동자 증  
세 반대' 같은 요구를 내걸어야 이런 단결  
을 이룰 수 있다.

이건희의 상속세 탈세만 제대로 처벌했  
어도 2조 원 넘는 돈을 건을 수 있었다. 조  
세도피처에 숨겨진 한국 돈이 9백조 원이  
넘는다. 국세청이 뇌물 받고 깎아 준 재벌  
세금도 어마어마하다.

노동자들이 뭉쳐서 이런 돈으로 복지를  
늘리라고 싸우는 게 정답이다.

## 노동자와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진실과 정의, 민중의 삶이 식제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2만 명이 넘게 모인 촛불 집회를 보도조차 안 했습니다. '장마철에 걸레를 삶아서 싸야' 한다는 뉴스를 메인으로 내보  
냅니다.  
가식적 중립을 거부하고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 (레프트21)은 우리 사회 99퍼센트의 눈과 귀와 입이 되고자 합니다.  
박근혜 시대, 기업 광고나 정부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 좌파 언론 (레프트21)은 민주주의와 진보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http://www.left21.com>

